

한국의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의 경제학: 확장

이종민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Economics of Antagonistic Conflict Between Political Forces in Korea: Expansion

Jongmin Lee^a

^aDivision of Economics and Information Statist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0, Revised 16 September 2020, Accepted 21 September 2020

Abstract

Purpose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intense political conflict in Korea's political circles, it is to reveal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hidden aspects behind the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is not a normative study to find a solution to political conflict, but a positive study to reveal the mechanism of reciproc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conflict in real politics. Therefore, the analysis is based on game theory methodology.

Findings - It is shown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choose a level of preemptive response that is neither insufficient nor excessive if it aims to avoid radical anti-government struggles by opposition parties. We also find that even if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opposition's radical offensive struggle are low, the use of that strategy is not necessarily reduced. In addition, we have obtained comparative static results that do not deviate much from our intui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unlike our intuition that the choice of the method will be indifferent if the marginal effects of radical and normal methods of struggle are the same, the opposition party rather chooses the normal method of struggle more ofte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forming the analytical model, it reflecte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opposition'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capture real politics well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parties.

Keywords: Political Forces, Political Conflict, Sequential Game, Backward Induction

JEL Classifications: P30, P48

I. 서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갈등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점차 장기적이고 파괴적으로 진전되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그것의 최소화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

^a First Author, E-mail: jonglee@kangwon.ac.kr

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노사 간, 빈부 간 등 해묵은 갈등의 불씨를 끄지 못한 초갈등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때 극명했던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사회가 양분됐고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빈부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다. 청년층과 노인층 간 세대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수준을 1로 할 때 OECD 평균은 0.51이지만 한국은 0.62이다.¹⁾ 또 2018년 영국 BBC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61%)으로 나타나, 같은 질문에 대해 연정과 협치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20%대에 비해 한국의 정치 갈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 한국민의 35%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적 관점이 다른 집단'을 꼽았다. 이는 프랑스(7%)의 다섯 배에 이른다.²⁾ 과거로부터 정치인들은 득표의 유효한 수단으로 지역갈등을 이용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통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며 소위 '너죽고 나 살기'식의 극단적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조정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는 정치권이 정작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³⁾ 많은 연구가 주로 자연스럽게 갈등 개념의 소개, 특정 사회영역과 이슈에 대한 갈등개념의 적용, 갈등의 원인, 갈등 해결을 방법의 모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⁴⁾ 한편 사회적 갈등의 마그마가 모이는 종착지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이고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치세력이다. 따라서 정치분야에서의 갈등 주제 역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 정치갈등 현상으로 두드러진 것은 정치체제, 정권의 성격 및 정책, 제도, 리더십의 유형, 정치문화와 정치의식 등에 의해 형성되고 표출되어온 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⁵⁾ 이런 논의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측면의 하나가 정치권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인한 적대적 갈등의 패턴과 그 정치문화일 것이다. 왜 우리 정치권은 죽기 살기 식의 대립과 반목이 반복되고 그런 갈등이 시간이 가면서 더 첨예해 지는 것일까? 정치권 자체의 극단적인 갈등의 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고도 내재적인 작동기제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나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내지 해결자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갈등의 새로운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정치권의 극심한 정치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 그 이면의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물론 많은 기존연구가 있지만 대개 가치관이 전제된, 따라서 갈등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규범적(normative) 연구가 주류이고, 정치권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바탕을 둔 여야 간에 존재하는 적대적 관계가 갖는 상호성

1)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적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2016.11

2) 중앙일보, 2018. 5월 5일자 기사 참조

3) 한국에서 해방 이후 970년대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하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표출이 억압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사전에 차단되어 왔던 시기이다.

4) 가령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고 그런 만큼 연구성과물도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가 사회학이나 행정학 분야이다. 초기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진행된 사회갈등에 이론적인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구의 성과는 한국사회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사회학』의 특집기획(1984)인 "사회갈등과 사회발전"에 실린 여러 논문들을 통해 정리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연구들은 분석수준이 더 정교해지며 사회갈등의 해결이나 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송복(1997)을 참조하라. 또한 행정학 분야에서는 행정조직 간 혹은 조직 내 갈등뿐만 아니라 민간과 행정조직의 갈등, 새로운 갈등 해결의 기제나 거버넌스의 구성, 구체적인 정책(사회정책이나 환경정책 등) 영역에서의 갈등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박상필(2000), 이선우 외(2001), 주재복(2001), 박천우□서우선(2004), 김두환(2005), 배용환(2005), 이병량 외(2008), 권혁주(2016) 등을 참고하라.

5) 논문검색엔진을 사용해 정치갈등을 포함한 사회 여러 영역의 갈등에 관한 문헌을 조사해 보면 많은 연구 문헌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각 학문 분야별 지금까지의 흐름을 쉽게 짚을 수 있다.

(reciprocity)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실증적(positive)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런 점을 메우기 위한 연구로 저자의 이전 논문(이선향·이종민, 2020)의 연장선에 있다. 이전 연구에서 한국의 정치세력 간 갈등 관계를 게임이론의 방법론을 통해 엄밀하게 분석했는데 이 논문도 그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는 두 정치세력 간 상호적 관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이 내놓는 정책을 폐기시키거나 자당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킴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보수(payoff)뿐만 아니라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적 보수도 얻을 수 있다. 가령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인센티브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은 무당파층으로부터 벗어나 대여 투쟁에 앞장 선 야당의 지지자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간접효과를 이전 연구에서는 감안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영향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이전 연구의 확장이다. 요컨대 적대적 정치세력 간 상호관계에 따른 간접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예측되어지는 정치적 균형의 함의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기존의 관련문헌에서 누락된 부분을 엄밀한 이론으로 메워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기본모형의 구성

우리의 기본 분석모형을 구성하자. 우선 정치적 대립의 주체는 여당(혹은 정부: G)와 야당(A)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의회의 다수당과 행정부 집권당이 같은 정당일 경우, 여당은 행정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따라서 여당(혹은 정부)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는 바, 그런 점에서 여당은 소위 선행자(first mover)이다. 한편,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야당은 여당의 정책 방향이나 추진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두 당의 귀속적 역할의 관점에서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적대적으로 견제하고 공격한다고 하자.⁶⁾ 이 때 야당의 견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즉 정상적인 방법(n)과 과격한 방법(d)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 과격한 방법은 대정부투쟁의 성격을 띠어 단번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 분열적 논쟁을 유발하지만(강성전략), 정상적인 방법은 대개 법 테두리 내에서 반대하는 통상적인 활동(온건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이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형의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전략에 대비해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한 수준을 $v \in [1, \infty)$ 라고 하자⁷⁾ 선제적 조치의 비용은 $C(v)$ 이며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C(v) = cv$ 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c(> 0)$ 는 한계비용이다. 또 야당의 투쟁에서 과격한 방법이 성공하면 야당은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지만 성공확률(ρ_d)은 정상적인 방법의 성공확률(ρ_n)보다 낮다고 하자. 따라서 분석을 위하여 다음을 가정한다. $\rho_n = 1/v$ 그리고 $\rho_d = 1/rv$, ($r > 1$).⁸⁾ 그러므로 $\rho_n > \rho_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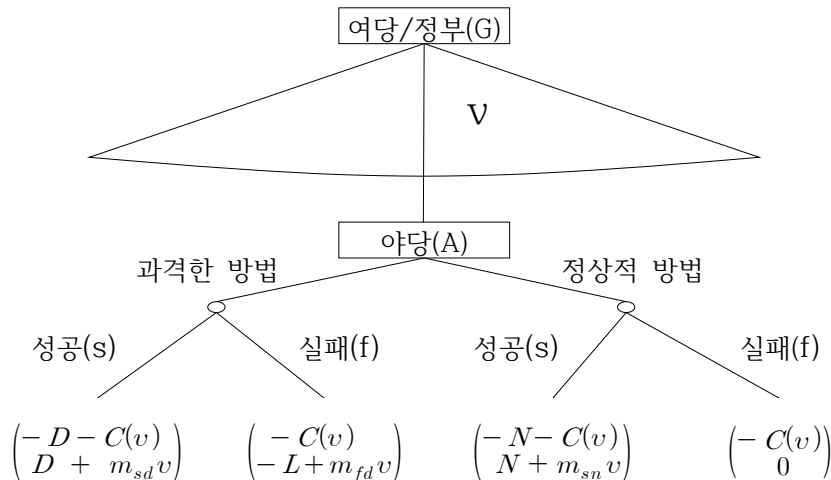
한편, 두 정치세력이 적대적 관계이므로 야당이 여당의 정책을 공격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키면 야당은 일정한 보수를 얻는 반면에 여당은 그 만큼 손실을 본다. 야당이 두 공격방법에 따라 얻는 직접적인 보수를 각각 D 와 N 이라고 하면, 역으로 그것은 여당입장에서는 손실이 된다. 또 야당은 대여 투쟁에서 여당정책의 무력화에 따른 직접적 이득뿐만 아니라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적 보수도 얻는다고 하자. 대개 정부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사회 내 구성원들의 인센티브가 바뀜으로 인해 적어도 정당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야당의 동조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⁹⁾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의 경우

6)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여당과 야당은 속성상 권력의 추구라는 점에서 영합게임에 가까운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7) 가령, 선제적 수준이 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온건적이고, 커질수록 강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8)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이 높을수록 야당의 정상적 투쟁방법의 효과가 미미함을 상정한다. 특히 현 한국의 상황에서 처럼, 의회권력의 주도상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고 따라서 야당의 투쟁방법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야당의 두 공격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방법에서 성공할 경우 간접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을 때만 발생한다고 하자. 그것은 야당이 여당과 매우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동안 여당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이 일반국민에게 보다 선명하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야당에게 한계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야당이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투쟁했지만 실패할 경우 그 보수를 0으로 가정하자. 그러나 과격한 방법인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자($L > 0$).

이와 같은 상황을 <그림1>과 같은 게임트리(game tree)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림1>에서 부채꼴의 모양은 여당의 전략이 연속변수이기 때문이다. 즉 여당은 음이 아닌 어떤 수준의 조치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의 전략공간은 무한집합이고 따라서 무한히 많은 선택대안이 존재함을 나타낸다.¹⁰⁾ 또 m_{ij} ($i = s, f; j = d, n$)는 야당의 선택전략과 성공여부에 따른 한계이득으로 이것이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다.¹¹⁾ 또 야당의 과격한 방법이 성공만 하면 실패할 경우보다 더 큰 간접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즉, $m_{sd} > m_{fd} \geq 0$ 를 가정한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부분게임(subgame)에서 보듯, 야당의 정상적인 전략이 성공하면 여당은 N 만큼의 손실과 또 정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N < D$ 이다. 이 때 야당은 N 만큼의 이득과 $m_{sn}v$ 의 간접보수를 얻는다. 또 정상적인 전략이 성공할 경우의 한계적 이득은 과격한 방법하에서의 한계이득 보다 작다. 즉 $m_{sn} < m_{sd}$. 그러나 우리는 과격한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의 한계적 이득과 정상적인 방법이 성공했을 경우의 한계적 이득의 상대적 크기는 결정할 수 없다. 즉 $m_{fd} \cong m_{sn}$. 우리는 파라메타들을 정치현실의 본질적 측면을 포착하는 동시에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설정했지만 그 두 개의 한계적 이득의 모호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다.

<그림1> 정치갈등의 게임트리



III. 간접효과와 균형

9) 가령 최근에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따라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10) A 의 결정마디는 한 점만 표시했으나 사실은 G 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에 대응한 무한개의 결정 마디가 있다.

11) 한계이득 때문에 우리의 게임은 순수한 영합게임(zero-sum game)은 아니다.

앞 절의 기본모형에서 설정한 것처럼, 여야의 정치게임에서 야당은 여당의 선제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나 견제를 할 경우 직접적인 반대급부 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다. 즉 자신의 투쟁전략에 따라 간접적인 한계이득을 얻는다. 이제 이 절에서는 그런 한계효과를 고려한 발생 가능한 결과(균형)를 도출하자. 야당의 선택전략과 성공여부에 따른 한계이득 $m_{ij} > 0$ ($i = s, f; j = d, n$)은 <그림1>의 게임트리의 마지막 마디에 표시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부수되는 한계효과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 수준은 불리한 측면을 내포한다. 이는 여당의 가혹한 대응수준 - v 의 크기로 측정되는 - 이 오히려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여당이 그 수준을 선택할 때 훨씬 신중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의 게임은 순차게임(sequential game)이다. 따라서 게임의 해 즉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 SPE)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야당은 여당에 대한 투쟁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야당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¹²⁾

$$E^A(d; v) \cong E^A(n; v) \tag{1}$$

여기서 $E^A(\cdot)$ 는 전략에 따른 야당의 기대보수로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E^A(d; v) &= \rho_d \times (D + m_{sd}v) + (1 - \rho_d) \times (-L + m_{fd}v), \\ E^A(n; v) &= \rho_n \times (N + m_{sn}v) + (1 - \rho_n) \times 0 \end{aligned} \tag{2}$$

식(2)에서 전자는 과격한 투쟁방법을 선택할 경우의 기대보수이고, 후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의 기대보수이다. 따라서 식(1)은 다음과 같게 된다.

$$\frac{1}{rv} (D + L + m_{sd}v - m_{fd}v) - L + m_{fd}v \geq \frac{1}{v} (N + m_{sn}v) \tag{3}$$

식(3)의 양변에 rv 를 곱해주면

$$rm_{fd}v^2 + (m_{sd} - m_{fd} - rL)v + (D + L) \geq r(N + m_{sn}v) \tag{4}$$

따라서 식(4)를 등식으로 성립하게 하는 두 개의 임계치 $v \in [v_1, v_2]$ 가 존재할 것이다. 식(4)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게 될 것이다.¹³⁾ 왜냐하면 식(4)의 LHS 에서 $(m_{sd} - m_{fd} - rL)$ 를 b 라 하고 또 $(D + L)$ 을 e 라고 하면 $LHS \equiv Av^2 + bv + e = 0$. 따라서 $dLHS/dv = 2Av + b = 0$. 또 $d^2LHS/dv^2 = 2A > 0$. 그러므로 LHS 는 Y 축의 절편 $e (= D + L)$ 와 최솟값 $v^* (= -b/2A)$ 를 갖는 포물선(parabola)이 된다.¹⁴⁾ 한편, 식(4)에서 $RHS = rN + rm_{sn}v$ 는 Y 축의 절편이 rN 이고 기울기가 $rm_{sn} (> 0)$ 인 우상향 직선이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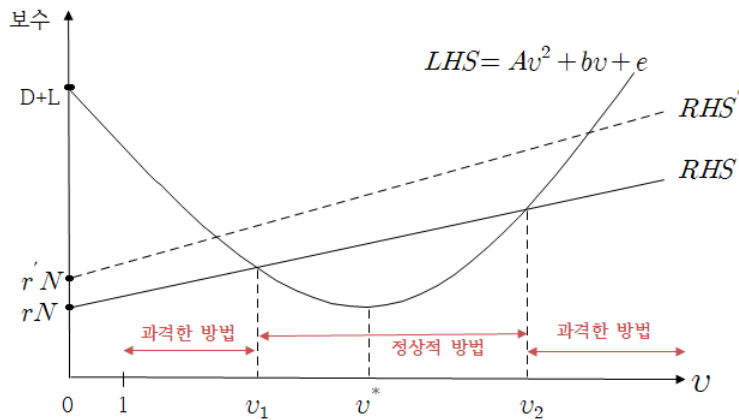
12) 기본 모형에서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않은(즉 $m_{sd} = m_{fd} = m_{sn} = 0$) 연구는 이선항·이종민(2020)을 참고하라.

13) 물론 두 곡선의 절편 크기는 $D > rN$ 이므로 당연히 $D + L > rN$ 이다.

14) 실제로 $v^* = (m_{fd} + rL - m_{sd})/2rm_{fd}$ 이 된다.

서 임계치의 하한(v_1)과 상한(v_2)이 야당이 선택하는 투쟁방법을 구분시킨다. 여기서 임계치의 정량적인 값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야당의 대정부 공격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라. 여당의 대응수준 $v \in [v_1, v_2]$ 에 대해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의 투쟁수준을 선택하지만 $v \leq v_1$ 이나 $v \geq v_2$ 이면 과격한 투쟁을 선택한다. 전자인 경우에는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야당을 약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당의 선제적 대응이 상한의 임계치 v_2 를 벗어날 만큼 매우 커 야당에게 한계이득을 발생시키고 결국 그것이 과격한 투쟁을 하도록 유인하는 충분한 자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2> 게임의 균형과 투쟁방법의 범위



이제 게임트리를 거슬러 올라가 여당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당은 야당의 예상되는 선택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선제적인 대응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단, 야당의 한계효과를 고려할 때 그 행동의 선택범위는 달라짐에 유의하라. 여당의 문제를 정형화시키면 다음과 같게 된다.¹⁵⁾

$$\begin{aligned}
 & \text{(i) } \max_v \{ \rho_d(v)[-D - C(v)] + (1 - \rho_d(v))[-C(v)] \} \quad \text{s.t. } v \leq v_1, v \geq v_2 \\
 & \text{(ii) } \max_v \{ \rho_n(v)[-N - C(v)] + (1 - \rho_n(v))[-C(v)] \} \quad \text{s.t. } v \in [v_1, v_2] \quad (5)
 \end{aligned}$$

여기서 $\rho_d = 1/rv$, $\rho_n = 1/v$ 그리고 $C(v) = cv$ 이므로 식(6)을 다시 표현하면

$$\begin{aligned}
 & \text{(i) } \max_v \left[-cv - \frac{D}{rv} \right] \quad \text{s.t. } v \leq v_1, v \geq v_2 \\
 & \text{(ii) } \max_v \left[-cv - \frac{N}{v} \right] \quad \text{s.t. } v \in [v_1, v_2] \quad (6)
 \end{aligned}$$

이제 식(6)을 라그랑제 함수로 구성해 최적화 문제를 풀면 우리는 여당의 SPE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첫 식의 1계 쿤터키 조건 중 내부해(interior solution)만을 고려하면, 여당은 야당의 과격한 방법의 선

15) 우리의 모형에서 여당의 목적함수는 오직 비용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극대화 문제는 곧 비용극소화 문제와 같다. 즉 여당은 야당의 예상되는 선택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수준(SPE)을 내놓는다.

$$v_d = \sqrt{\frac{D}{rc}}$$

마찬가지로 식(6)의 두 번째 극대화문제 역시 라그랑제 함수를 만들어 쿤-터건 1계조건을 적용하면

$$v_n = \sqrt{\frac{N}{c}}$$

이 식은 야당의 정상적인 투쟁방법과 관련된 SPE이다.

이 때 SPE는 다음과 같은 외생적인 파라메타들의 모든 값에 대해 완전히 특정될 수 있다. 즉 $v_n \in [v_1, v_2]$ 이면 $v = v_n$ 이고 야당은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다. 또 $v_n \notin [v_1, v_2]$ 이고 $v_d \leq v_1$, 혹은 $v_d \geq v_2$ 이면 그 때 $v = v_d$ 이고 야당은 과격한 방법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v_d \in [v_1, v_2]$ 이고 $v_n < v_1$ 이면 그 때 $v = v_1$ 이고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과 과격한 방법 간에 무차별하다.

따라서 SPE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우선 여당이 $v \in [v_1, v_2]$ 에서 $v = \sqrt{N/c}$ 를 선택하면 야당은 정상적인 공격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응의 한계비용 c 가 낮다면 여당은 야당의 과격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v_2 를 넘는 대응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야당은 기대되는 한계적 이득 때문에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다. 또 다른 SPE는 $v \in [1, v_1]$ 에서 정부가 $v = \sqrt{D/rc}$ 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 가능성 때문에 과격한 공격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여당은 야당의 부수적인 보수 특히 한계이득으로 인한 보수를 예상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진 과격한 공격을 사용하지 않을 그 정도로만 정책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요컨대 여당은 야당에 의한 과격한 대정부투쟁 방법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모자라지도 않고 또 과도하지도 않는 대응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IV. 비교정확

이제 논의의 확장으로 야당의 투쟁방법의 선택에 따른 간접적인 한계이득을 중심으로 몇 가지 비교정확의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야당이 과격한 방법을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이는 여하한 이유로 과격한 방법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rho_d = 1/rv$ 에서 외생적 파라메타 $r (> 1)$ 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⁶⁾ r 의 증가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즉 식(4)에서 *LHS*와 *RHS* 모두에 영향을 주며 그것은 <그림2>의 두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r 의 증가는 *RHS*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2>에서 *RHS*가 *RHS'*으로 상향 이동하여 정상적 방법의 선택범위가 더 넓어진다. 한편, 식(4)의 *LHS*도 r 의 영향을 받아 <그림2>의 포물선을 이동시키는데 그것은 과격한 방법에 따른 간접적인 보수와 손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frac{\partial LHS}{\partial r} = v(m_{fd} v - L) \tag{7}$$

16) 따라서 $\rho_n (= 1/v) > \rho_d$ 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과격한 방법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인 동조에 따른 보수보다 크다면 ($m_{fd} v < L$), <그림2>에서 포물선은 하향이동(그리지는 않았음)하게 되어 r 의 증가에 따른 LHS 의 상향이동과 함께 정상적인 방법의 선택범위를 한층 넓힌다.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방법이 실패를 하더라도 간접보수가 충분히 큰 경우($m_{fd} v > L$)에는 포물선이 상향이동하게 되어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의 선택범위를 좁히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의 선택범위는 상반되는 두 곡선의 상대적인 이동폭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결과는 과격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면 과격한 사건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과격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간접적인 한계이득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비교정확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명제1> 야당의 과격한 투쟁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방법의 사용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과격한 투쟁이 실패할 경우 수반되는 한계영향(m_{fd})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요약된다.

<명제2> 과격한 투쟁방법이 실패를 하더라도 간접적인 보수가 증가하면 과격한 방법의 선택은 늘어난다.

(증명) 식(4)의 LHS 에서

$$\frac{\partial LHS}{\partial m_{fd}} = rv^2 - v = v(rv - 1) \geq 0. \quad (8)$$

왜냐하면 $\rho_d = \frac{1}{rv}$ 이고 $0 \leq \rho_d \leq 1$ 이므로 $rv \geq 1$ 이기 때문이다.

m_{fd} 가 증가하면 <그림2>에서 포물선이 상향이동하게 되어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선택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충분히 커진다면 그것이 LHS 와 한 점에 접하게 되어 오직 과격한 방법만이 선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과격한 투쟁이 성공할 경우 그 한계영향(m_{sd})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결과를 얻는다.

<명제3> 과격한 투쟁방법이 성공할 때 그 간접적인 보수가 증가하면 과격한 방법의 선택은 늘어난다.

(증명) 식(4)의 LHS 에서

$$\frac{\partial LHS}{\partial m_{sd}} = v \geq 1. \quad (9)$$

따라서 v 만큼 포물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고 정상적인 투쟁방법 범위가 줄어든다. 이 명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이다.

한편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성공에 따른 한계이득의 영향은 어떤가? 이 또한 <명제3>과 같은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명제4〉 정상적인 투쟁방법이 성공할 경우 부수되는 한계이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투쟁방법은 늘어난다.

(증명) 식(4)의 *RHS*에서
$$\frac{\partial RHS}{\partial m_{sn}} = rv \geq 1. \quad (10)$$

따라서 <그림2>의 *RHS*곡선의 *Y*축 절편은 불변이지만 기울기를 증가시켜 정상적인 방법의 범위가 넓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명제3>과 <명제4>를 대비시켜 보면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범위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두 방법의 한계이득의 크기가 같을 경우 ($m_{sd} = m_{sn}$) 최종효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명제5〉 과격한 투쟁방법과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한계이득이 같을 경우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증명) 식(9)와 식(10)에서 등식의 좌변의 크기를 비교하면 $rv > v$ 이다.

요컨대 두 가지 투쟁방법에 따른 한계이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이 더 우세하다. 이런 결과는 과격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더 작기 때문이다. 즉 $\rho_n = 1/v$ 이고 $\rho_d = 1/rv$ 이므로 $\rho_n > \rho_d$ 이다.

한편,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야당의 과격한 투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수 *D*가 증가하는 경우는 대정부 투쟁방법의 선택 범위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명제6〉 과격한 투쟁방법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득이 증가하면 과격한 방법의 선택범위가 증가한다.

(증명) 식(4)에서 $\partial LHS / \partial D = 1 > 0$.

이는 <그림2>에서 *LHS*의 포물선의 *Y*축 절편이 증가하면서 포물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범위가 축소된다. <명제6> 역시 직관적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과격한 투쟁방법이 실패할 경우 야당이 감수해야 하는 직접적인 손실(*L*)의 변동이 투쟁방법의 선택범위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명제7>로 요약된다.

〈명제7〉 과격한 투쟁으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야당은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증명) 식(4)에서

$$\frac{\partial LHS}{\partial L} = -rv + 1 < 0 \quad (\because rv > 1) \quad (11)$$

이 *L*의 증가는 <그림2>에서 수직 절편을 증가시키지만 포물선을 우측 하방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V. 결론

어느 사회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그 사회가 선진사회인가 혹은 성숙사회인가의 여부는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갈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상호경쟁적인 집단 간의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강압적인 형태를 띠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 기본적인 속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행동 속에서 상대방을 굴복, 손상, 좌절시키거나 또는 자기 의사대로 통제를 기도하는 강압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이런 관점에서 적대적인 정치갈등은 한 정치사회 내에서 정부나 정책 또는 정치지도자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설적인 것은 어느 사회나 사회의 다양한 갈등현상을 조정하고 풀어가는 주체가 정치집단이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권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에 엄청난 갈등이 내재적으로 상존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인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상황 하에서 야당의 투쟁방법의 선택과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 사이의 상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적대적인 두 정당 간의 갈등패턴을 경제학적 분석 모형으로 내재화하고자 했다.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두 대립적인 주체를 중심으로 보다 현실정치를 포착하기 위해 야당의 대외 투쟁에 따른 무당파층의 동조를 반영하고자 했다. 입법과 정책의 선행자인 여당의 선제적 대응 수준에 따라 사회 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바뀔 것으로 인해 적어도 정당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야당의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시에는 중도파로 있던 사람들이 특정사안에서는 야당에 동조하는 집단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두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런 대중의 움직임에 감안하는 간접영향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 이 논문의 분석모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전 논문(이선향·이종민, 2020)의 확장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의 선제적 대응이 미약할 경우와 반대로 매우 강할 경우 야당은 오히려 과격한 투쟁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의 대외 투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적절한 선제적 대응수준을 찾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여당은 야당에 의한 과격한 대정부투쟁 방법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모자라지도 않고 또 과도하지도 않은 선제적 대응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의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효과가 투쟁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비교 정형 결과들을 보면 대개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다. 우선 흥미로운 점은 야당의 과격한 투쟁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방법의 사용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이 증가하면 과격한 투쟁방법의 선택이 증가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 또 과격한 투쟁방법이 성공할 경우 그 직접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가 커질수록 그것의 빈도가 증가한다. 반대로 과격한 투쟁으로 인한 손실이 커질수록 야당은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다. 이 역시 직관적인 결과이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투쟁방법에 따른 한계이득의 영향은 어떤가? 정상적인 투쟁방법이 성공할 경우 그 한계효과가 커질수록 정상적인 투쟁방법은 증가한다는 직관적인 결과가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과격한 투쟁방법과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한계영향이 같을 경우에는 어떤가? 이 경우 두 방법의 선택이 무차별할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과 달리, 야당은 오히려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더 자주 선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두 투쟁방법에 따른 한계이득이 동일하더라도 야당은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호한다. 이는 과격한 투쟁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보인 일련의 분석결과는 흥미로운 점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다. 이는 역으로 우리가 고려한 이론적 모형이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석모형이 정치 세력 간의 현실적 관계를 다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정당 간의 적대적 관계를 한층 엄밀하게 내재화시켜 그 토대위에서 다양하게 모형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연구가 축적되면 향후 정치권 변화의 방향을 사전에

이론적으로 예측하여 적대적 갈등관계를 완화 내지 조정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사료된다.

References

- 김이배, 전규안, 박상형 (2017년 11월), “사회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개정안”, SK텔레콤주식회사 고상두 외 편 (2016),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소통*, 서울:오름.
- 권혁주 (2016),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행정논총*, 54(2), 93-116.
- 김두환 (2005),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비교”, *시민사회와 NGO*, 3(1), 143-171.
- 김영세 (2012), *정치게임과 공공경제*, 서울: 을곡출판사.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121-138.
- 박천오, 서우선 (200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38(4), 107-124.
- 배용환 (2005), “로컬 거버넌스: 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187-215.
- 송복 (1997),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경문사.
- 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9-72.
- 이선우 외 (2001),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협상론적 제해서: 정책갈등 해결의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23-252.
- 이종민, 윤보현, 이윤복 (2020), *경제·경영수학*, 서울: 도서출판 청담.
- 이종민 (2019), “정부와 NGO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모형의 탐색”, *한국공공관리학보*, 33(3), 135-154.
- 이신향, 이종민 (2020), “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1), 47-67.
- 정태석 (2011), “적대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적 헤게모니”, *급진민주주의의 리뷰*, 창간호, 23-245.
- 조희연 외(2008),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 서울: 한울.
- 주재복 (2001),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서울시와 경기도 상수도 분쟁”, *한국정책학회보*, 10(1), 141-163.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사회적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 Breen, K. (2009), “Agonism, Antagonism, and the Necessity of Care’s”, in Schaap, A. ed. *Law and Agonistic Politics*. Aldershot: Ashgate.
- Deveaux, M. (1999), “Agonism and Pluralism”,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25(4), 1-22.
- Erman, E. (2009), “What is Wrong with Agonistic Democracy: Reflections on Conflict in Democratic Theory”,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35(9), 1039-1062.
- Fossen, T. (2008), “Agonistic Critiques of Liberalism: Perfectionism and Emancipation”,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7(4), 376-394.
- Gürsozlu, F. (2009), “Debate: Agonism and Deliberation-Recognizing the Differ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7(3), 356-368.
- Moore, W. H. and D. Siegel (2013), *A Mathematics Course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orval, A. J. (2007), *Aversive Democracy: Inheritance and Originality in the Democratic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son, J. (2008), *Strategy: An Introduction to Game Theory*(2nd ed.), NY: W.W. Norton&Company.